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5월 2일,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5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11. 1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 11. 20.) 상정·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 12. 1.)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
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2025. 12. 3.)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
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2025. 12. 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
론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민형배의원)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규를 자의적으로 적용해 법을 왜곡하는 판사나 검사는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 왜곡죄 도입이 시급합니다. 법원과 검찰은 수많은 사건에서 실제적 진실과 사법정의를 외면한 채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를 자행한 판사와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 검찰, 경찰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일반 공무원이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를 하는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정작 법의 최종 판단자인 판사나 검사가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하는 행위는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법 정의가 훼손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적으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정의실현을 방해하는 경우 ‘법 왜곡죄’로 처벌하도록 하려 합니다. 단순히 처벌 강화를 넘어,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려는 것입니다(안 제123조제2항·제3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해당 법률안은 2025년 11월 11일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6.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내용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박지원)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7. 찬반토론의 요지

(곽규택의원)

2심 재판에서 무죄선고한 사건을 3심재판에서 파기환송하면 법왜곡죄
에 해당하게 됨. 판사와 검사를 협박하게 됨.

(박은정의의원)

2023년 독일에서도 마스크 착용 관련하여 정치적 편향에 따라 특정 집단에 유리한 결정을 한 사건에서 법왜곡죄 유죄를 인정함. 우리도 법 적용을 잘못된 판사 검사를 법왜곡죄로 처벌할 필요

8.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